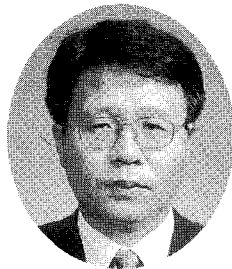




#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길

생산성·제도개혁 등 기대 못미쳐, 농업보호의지 전과 달라  
농업·농촌 발전 위해 친환경농업·도농교류 동시 추진해야

21세기를 품에안은 지금 우리 농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IMF 경제위기로 인한 소득감소의 터널을 빠져나오자 구제역과 미국산 오렌지 수입과동이 농민의 시름을 더하게 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도 쇠고기 수입 개방을 앞두고 한우농가들은 사육을 계속할 것인지 망설이고 있고 2004년으로 예정된 쌀 재협상에 대한 불안감도 떨쳐 버릴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소비자인 국민과 예산당국의 농업보호 의지는 예전과 같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UR 협상 과정에서 국내 농업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농산



오 내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물 소비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42조 투융자계획과 15조 농특세사업이 추진되었던 분위기는 이미 아니다. IMF 체제 하에서 국민소득이 낮아지고 재정이 어려워진 데에도 이유가 있지만 농업의 투자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생산성 향상과 제도개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이 사회분위기가 바뀐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농업인구의 감소와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차세대 농업을 담당할 후계인력의 충원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경지조건이 열악하고 교육·의료 등 생활기반

이 낙후되어 있는 산간·도서지역에서는 인구가 과다하게 빠져나가 농지가 급속하게 휴경되고 있는가 하면 지역사회의 공동화(空洞化)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 ‘농업의 역할’ 재정립 필요

이처럼 우리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국내의 환경은 장래에 대한 낙관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를 비판적으로 되돌아보고 변화하는 국제환경을 잘 살피 농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원칙을 정립하는 일이 우리 농업과 농촌이 유지되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작업은 농업에 대해 국민경제와 사회가 어떠한 역할을 요구하는가를 바르게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1970년대까지 우리 농업에 요구된 역할은 주곡인 쌀을 자급함으로써 기아를 해결하고 외화를 절약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1980년대 중반 이후 농업의 정체성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이제는 식량의 절대량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인 생산, 즉 외국과 같이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요구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식량안보 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농업도 시장경제의 원리를 따라 대외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당위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90년대의 농업구조정책은 이러한 인식 위에서 경영규모 확대, 기술 보급, 시설 투자를 통해 생산비를 낮추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농업구조정책은 농업의 외적 형태를 어느 정도 변화시켜 왔다. 예를 들어 쌀 3ha 이상 농가 수는 1990년 1만 8천호에서 1998년에는 3만 5천호로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쌀 생산비는 30% 정도 절감되었다. 같은 기간에 한

우 생산비는 37% 낮아졌고 토지생산성은 1.6배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국제경쟁력 달성이란 당초 목표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998년 기준으로 주요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를 보면 쌀이 3.56배, 콩 5.26배, 고추 1.95배, 참깨 10.7배, 쇠고기 2.32배, 닭고기 1.71배에 달하고 있다. 더구나 차기 협상에서 관세율을 예전보다 빠르게 감축한다면 우리 농업에는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현실은 농산물의 생산 효율성만으로 평가하는 한 우리 농업의 존립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으로 농업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 ‘소비자 신뢰 구축’이 정부 정책과제

산업화 후기 단계인 21세기에 식량을 값싸게 공급하는 것은 농업이 담당해야 할 많은 역할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보다는 오히려 건강과 생명에 안전하며 맛과 모양이 뛰어난 고품질 식품, 음식문화를 풍부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농산물의 공급이 소비자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편, 생산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토양과 물의 오염, 농업생산 자체가 가지는 수자원 보전, 생물다양성 함양, 고용과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의 보전과 휴양공간 제공 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다면적 기능’은 유럽과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수출국들의 농업보호정책 감축 요구에 대응한 논리 개발이란 측면도 있지만 농업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농업의 다면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면 이러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우리 농업의 발전방향을 설

정해야 할 것이다. 즉, 소비자들이 원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농촌의 경관과 문화를 보전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민이 농업과 농촌의 존재 의의를 느낄 수 있으며, 값이 좀 비싸더라도 국산 농산물을 찾게 되고 농업·농촌에 대한 재정지원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환경농업과 도농교류의 실천이다. 환경농업은 유기농업 등 좁은 의미의 농법만이 아니라 토양 특성과 작물에 따른 적정 시비, 병충해의 정확한 예찰에 의한 농약 사용 등 과도한 화학투입재의 사용을 낮추려는 농법을 포괄한다. 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농업이 친환경적으로 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농민들의 자각이 필요하다. 여기에 환경농업기술 개발과 관련 자재의 인증과 보급, 품질인증제와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과제라 할 수 있다.

### 소비자 '농업인 노력' 적극 평가해야

한편, 도농교류는 도시민이 농촌의 자연과 생산활동, 전원생활, 전통문화를 학습·체험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도록 유도하는 운동이자 관광사업이다. 과거의 레저 문화가 대체로 자연을 감상하거나 대형 위락시설에서 즐기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면 앞으로는 한 곳에 체류하면서 휴식과 자연·문화체험을 겸하는 가족단위의 관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와 주년휴가제가 확대된다면 관광·레저의 패턴은 더욱 빠르게 변모할 것이다. 도농교류는 이러한 흐름에 적극 부응하면서 특히 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형성해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도농교류의 확

산을 위해서는 주택개량, 마을 가꾸기, 꽃길 조성 등 농촌 환경의 정비와 함께 농촌 지역에서조차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의 복원과 보전, 그리고 농촌의 자연·생산·생활·음식·문화를 도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농업과 농촌의 발전은 별개의 것이 아니며 상호의존성이 매우 강하므로 환경농업과 도농교류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도농교류의 핵심 내용은 환경농업이며 도농교류를 하기 위한 농촌정비와 문화의 보전은 농민들이 농촌에 거주하도록 하는 유인이 된다는 점, 산업으로서 농업이 지속되어야 농촌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환경농업과 도농교류는 짧은 기간에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눈 앞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10년, 20년 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농업과 농촌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농가 소득을 지원하고 농촌 지역의 정비를 위한 투자를 계속해나가야 하며 소비자는 농민의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농약정보**